



한반도 포커스

4.11총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과제

2

휘어진 '2013년체제' 평가: 4.11 총선과 한반도 정세

김종욱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6

2012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대북정책 방향

정낙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10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한 새로운 출발

박경순 (통합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14

김정은 체제 구축과 남북대결: 불안한 기싸움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7

로켓발사 이후 북미관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휘어진 ‘2013년체제’ 폐기: 4.11 총선과 한반도 정세

김종욱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kjw77@daum.net

이명박 정부 4년은 다음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외면하며 살아온 불과 몇 년의 기간에 한반도는 사람살기에 너무나 위험한 공간이 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후퇴했으며, 제법 잘나간다고 호언하는 남한의 경제도 서민의 희생 위에 일부 재벌기업을 살찌우면서 무지막지한 환경파괴와 공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대를 통해 지탱하고 있다.”¹⁾ 이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보편적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이번 총선이였다. 민주진보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2013년체제 구축은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한 상징적 목표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그 목표를 휘어지게 만들었다.

‘패배의 겸허한 인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행동’

4·11총선 결과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선거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갖는 시대적 의의를 감안한다면, 선거결과는 민주통합당에게 ‘가혹한’ 현실 그 자체다. 좌절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의 평가는 미래를 어둡게 한다. 철저한 평가와 냉철한 인식, 그리고 겸손한 성찰과 진지한 행동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여하간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 총선 결과는 어떠한 통계자료와 수습논리를 제기한다고 해도 패배였다는 사실에 변함은 없다. 이런 평가와 입장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며 행동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총선결과의 민의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요구와 변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정당혁신과 공천과정 모두에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유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즉 우리의 행동과 메시지의 불일치로 인해 유권자가 정당에게 요구했던 ‘민생·신뢰·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여론조사 통계의 함정에 빠져 국민 일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으며, 반MB 유권자를 유인할 수 있는 내러티브(narrative)도 만들지 못했다. 민심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유권자의 욕망이 무엇인지 읽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유권자의 흐름 포착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움 vs. 낡음’의 구도를 읽어내지 못했다. 국민은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새 정치를 요구했다.’²⁾ 그것은 기성정치와 다른 새로운 인물과 가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물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읽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정권심판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그 추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정권심판론’을 통한 지속적인 유권자 동원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이 축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유권자의 정당혁신에 대한 요구를 읽지 못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여와 야 모두에게 당의 자성과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정당혁신과 공천혁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넷째, '정권심판론'의 관성에 의해 강고한 보수 세력의 존재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대처했다. 역대 선거에서 확인되듯,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론'이 선거에서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했다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민주진보진영이 향후 'α'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정당위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총선결과를 통해 민주통합당은 정당혁신과 민생정책이라는 양 바퀴 위에 정권심판의 수

이런 총선결과를 통해 민주통합당은 정당혁신과 민생 정책이라는 양 바퀴 위에 정권심판의 수리를 올려놔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와 정책, 겸손한 리더십, 행동하는 실천주의이어야 할 것이다. 즉 대선승리의 가능성은 정치공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주통합당의 자기혁신에서 시작될 것이다.

레를 올려놔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와 정책, 겸손한 리더십, 행동하는 실천주의이어야 할 것이다. 즉 대선승리의 가능성은 정치공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주통합당의 자기혁신에서 시작될 것이다. 또한 흔히 중도 층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분석과 선거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운 유권자'는 탈이념·탈권위·탈중심적이며, 동시에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집단이다. 이 유권자 층은 전통적 의미의 중도성향이 아니라 일정한 진보성을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가치에 동의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유권자 층은 자기혁신 없는 야권 단일화와 관성적인 복지노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인 야당 지지

층과 '새로운 유권자 층'을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전략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 출렁이는 대선

2012년은 '요동의 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통과해야 하고, 이 변곡점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은 '2013 체제'로 진입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의 발사 이후, '2·29 북미합의'는 깨져버렸고 유엔안보리의장성명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6자회담은 계속 표류상태에 머물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북한을 무시하는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대결과 긴장도 지속될 것이다.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핵심 이해당사국인 미국(11월)과 중국(10월)이 권력교체가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동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당사국과 주변국의 정치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황의 전환을 위한 노력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2012년 각 국가의 선거결과를 보고 정책적 선회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환경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정세는 2013년 상반기까지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입장에서 현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도 권력의 교체와 무관하게 급진적인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이 낮다. 미·중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이익

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작년 11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기고문에서 “아시아의 성장과 역동성은 미국의 경제·전략적 이익의 핵심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규정하며 동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다. 중국도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즉 미·중은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하고, 북한은 대화를 강제하기 위해 위기를 증폭시키는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환경과 구조 속에서 민주통합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대화로 전환시키고, 6자회담을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은 대북정책 전환과 6자회담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출렁이는 대선정국에서 민주통합당의 진보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 가치는 12월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다

복원시켜야 한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은 대북정책 전환과 6자회담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출렁이는 대선정국에서 민주통합당의 진보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 가치는 12월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다.

‘2013년체제’ 만들기와 한반도 평화 공영시대

12월 대통령선거 승리를 통해 ‘2013년체제’로 진입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목표다. 특히 2013

년체제’는 ‘민주·평화·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청경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대외전략은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가는 것이다.³⁾ 한반도 평화·공영 구상은 남북관계의 담보상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아 구상’으로 제시된 전략을 동아시아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것이다.⁴⁾

민주통합당의 기본원칙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로드맵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그 구축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구성, 한반도 평화·공영 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연합으로의 진입,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의 선순환 구조 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서해평화경제협력지대’로의 전환,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북방경제’ 3대 SOC사업 추진, 동아시아공동체 촉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10·4 정상선언의 합의내용이며,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2·3단계 추진, 북-중·북-러 접경지역과 금강산·원산지역 평화경제특구로의 확대추진 및 대륙철도·아시안하이웨이(AH)·남북가스관연결사업

등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평화·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투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국회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과 제도,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 즉 남북대화과 6자회담의 재개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혜를 발굴하고 모으는 것

국가의 미래비전과 결합된 대북정책, 평화와 경제 모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북정책,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대북정책이어야 한다.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의해 민주적 규제되는 외교안보 정책수립·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다. 그것이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총선의 패배는 '2013년체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제도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복원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심각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세계와 동아시아,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대선승리와 '2013년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대북정책의 업그레이드(upgrade)가 필요하다. 기존 대북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서 소위 '포용정책 2.0'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단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안티테제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미래비전과 결합된 대북정책, 평화와 경제 모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북정책,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대북정책이어야 한다.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의해 민주적 규제되는 외교안보 정책수립·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회가 개원되면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5·24조치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 총선에 의해 휘어진 '2013년체제'를 똑바로 펴야 한다. 

NOTES

- 1) 백낙청, 『2013년체제 만들기』(서울: 창비, 2012), p. 19.
- 2)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EAI·YTN·한국리서치 공동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 유권자들은 '새 정치를 믿어줘야 한다'에 59.5% '비공감' 37.9%가 공감했다. 정한울, "10·26 서울시 보궐선거 전망," 『EAI 여론브리핑』 제104호, pp. 6~7.
- 3) 민주통합당의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pds&id=10233>
- 4) 김종욱,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국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2011), p. 194.

2012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대북정책 방향

정낙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inkprez21@naver.com

세간의 예상과 다르게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들이 만만치 않기에 크나큰 걱정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19대 국회가 감당해야 할 향후 4년의 국가미래가 엄중하기에 이 시점에서 특정정파의 승패와 공과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총선 승리가 8개월 후의 대선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12월 대선의 정치환경이 새누리당에게 결코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면서 1대 99의 편가르기가 아닌 100%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또한 남남갈등, 남북갈등의 늪에 빠져 계속 허우적대고 있을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해서 새누리당은 남북관계의 대립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한민족의 평화공영으로 가는 새롭고 보다 진화된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단은 대선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2012 한반도 정세, 현상유지형 관리모드로 전개 예상

2012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함에 있어 다음 3가지 요인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국가들이 권력교체기에 있다는 점이다. 권력교체기에는 내부 권력게임에서 승리하

는 것이 무엇보다 절박하기 때문에 외정(外政)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북한 김정은체제의 행보와 관련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물론 한국은 북한문제가 안보·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우선 순위가 높지만, 주변국들은 '북한'보다는 북한이 가진 '핵과 미사일'에 관심이 더 높다. 이처럼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북한도 대남전략과 대외전략을 다르게 구사할 수밖에

북한을 제외한 5국은 국내의 권력 향방이 결정된 이후 북한문제의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며, 북한 또한 그때를 대비할 것이다. 각국은 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을 뒤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또한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카드를 적극 사용하기보다는 2013년의 본 협상을 위해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

에 없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해 갖는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교체가 마무리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동북아의 국제적 권력게임 속에서 각국의 북한문제 처리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올해 후반기에 드러날 각국의 권력교체 결과다. 권력교체는 대체로 외교력이 약화되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정책결정자가 대외문제에 관한 책임있는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대외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보다는 현상유지상태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향

* 본고는 필자의 사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강하다. 2012년의 한반도 정세 또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5국은 국내의 권력 향방이 결정된 이후 북한문제의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며, 북한 또한 그때를 대비할 것이다. 각국은 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을 뒤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또한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카드를 적극 사용하기보다는 2013년의 본 협상을 위해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곧, 김정은체제의 정비와 안정화를 완결짓기 위해 동북아 권력게임구도를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대외공세가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2013년의 본격 협상국면을 위해 대외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각인시켜 놓을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4.13), 그리고 제3차 핵실험 협박도 체제안정이라는 대내적 목적과 대미·대중 그리고 북한의 자기존재 과시라는 대외적 목적을 동시에 가진 카드다. 그런데 북한의 로켓발사가 실패로 끝났다. 특이한 것은 발사 이전에 국내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책임을 묻는 강도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사 '실패'가 과학기술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 스스로 주장하듯 '차푹' 인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써 동북아 판도에 예상만큼의 심각한 충격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조만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건의 크기에 비해 파장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여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약속하고 이를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국가권력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의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충격과 변화보다는 현상유지형 관리모드로 갈 것이며, 각국은 2013년의 빅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를 내부적으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북한 김정은체제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5개월 사이에 빠르게 김정은체제를 안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거 김위원장의 권력 장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알다시피 북한은 수령절대주의체제다. 인치(人治)와 제도가 일체화된 체제다. 김위원장은 20여년에 걸쳐 권력승계 작업을 해오면서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헌통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김정은체제는 좀 달라 보인다. 현재 김정은이 당·정·군의 1인자 위상을 확보했다고 하지는 '주어진' 권력일 뿐, 김위원장이 가졌던 절대권력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 최근 '김정일 유

적어도 정치·군사적 대립과 차이가 당장은 해소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이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인도적 교류 협력을 병행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공영의 기본정신을 담은 남북한 사이의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

언'이라고 공개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내용대로 유언집행권이 김경희에게 있다면 이는 김위원장이 '직접' 틀어쥐고 했던 유헌통치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김경희 유고시 김설송에게 유언집행권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 또한 고위권력층으로부터 절대적 복종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이 때문에 김정은체제가 부정되거나 권력찬탈을 통해 김씨가 아닌 다른 성(姓)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공동통치의 집단지도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위원장의 통치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김위원장은 2인자를 두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김위원장의 사망으로 정책결정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선뜻 '책임지고' 나서려 하지 않았을 것이

다. 지금 김정은체제의 정비가 제도적으로는 마무리되었다고 하나, 체제의 성공적 안착 여부는 추후 제기될 각종 대내외 현안들에 대해 김정은 제1비서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점에서 향후 우리가 대북전략을 수립할 때 김정은의 리더십 구축과 관련한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대북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2. 대북정책을 넘어 한반도·한민족 경영을 위한 '新북방정책' 필요

정책은 사실(fact)보다는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이라는 동일한 실체를 두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사이에 정책의 편차가 크다. 더구나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일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파간 대북인식과 정책은 상호 충돌하며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해법을 초정파적으로 모색하지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민족적 합의에 바탕을 둔 초정파적 정책 수립과 실행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야당은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대북 온건정책을 주장하고, 이명박정부와 여당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고수했다. 야당이 과거 10년 집권을 통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양적 성과를 이루어냈다면, 이명박정부 4년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 결국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정책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21세기 12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어느 정책도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목표에 더욱 가까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정세환경에 부합하면서 한반도와 한민족의 평화공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요청된다.

이에, 새로운 대북정책은 다음의 방향에서 구상되고 수립돼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와 한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주된 초점이 북한정권에 집중됨으로써 정치·군사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남북의 대립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되어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군사적 대립과 차이가 당장은 해소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이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인도적 교류협력을 병행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공영의 기본정신을 담은 남북한 사이의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

둘째, '불안의 시대'에 조응하는 대북·통일정책의 구상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로부터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20년의 기간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를 만끽한 '낙관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자유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기능주의 어프로치가 지배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로 '불안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급기야 성장제일주의를 넘어선 '자본주의 4.0'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남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의 위기, 북쪽은 경제의 황폐화로 인한 저성장의 위기, 그리고 환경오염·기후변화 등과 맞물린 환경의 위기 등은 한반도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신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정책·전략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북한문제를 '우리문제'로 그리고 '한반도·한민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북방을

향한 한반도 경영의 전략을 마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태평양시대를 여는 원동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 통합의 정책·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중견국가(middle power)' 대한민국의 역량에 걸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분단번영의 최고치에 도달했다.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21세기적 위기를 극복하여 한반도 전역의 발전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신통일국가 창조'를 핵심목표로 설정한 대북·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성장과 복지, 통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통한다. 대한민국에 국한된 국민경제·국민복지를 민족경제·민족복지와 연동

대한민국에 국한된 국민경제·국민복지를 민족경제·민족복지와 연동하여 접근함으로써 상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통일은 정치·군사·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과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일경제사업'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여 접근함으로써 상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통일은 정치·군사·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과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일경제사업'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설정되고 상호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반도 차원에서는 평화적 방법으로 신통일국가를 '건설'하고 한반도 전역의 공영을 달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남한은 체제진화를, 북한은 개혁·개방을 거쳐 체제진화로 나아가는 남북한 체제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해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반도는 '복합네트워크 허브'를 지향한다. 동북아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과 군비경쟁을 동시에 보여주는 독특한 지

역으로, 경제발전이 군비경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특이한 현상이 전개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한반도의 역할은 매우 크다. 곧, 한반도가 동북아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중재자 및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리하고 동아시아 평화·공영·조화의 복합네트워크 허브를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적 차원에서 한반도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추동한다. 통일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관문으로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은 한반도의 공진화 평화통일을 촉진할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서부터 한국이 분단번영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9대 국회 4년과 차기정권 5년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통일을 포함하여 21세기 전반기 우리 민족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50년, 100년의 장기적 국가전략은 지정학적 요인을 바탕으로 구상해야 하겠지만, 10년의 국가전략은 정치지도자들의 역량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10년의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목표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부응하는 '창의적' 국가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구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그리고 민족 모두가 총체적 위기 돌파에 합심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한 새로운 출발

박경순 (통합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pkskik@daum.net

4.11 총선은 대다수 진보 민주개혁세력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야심 차게 준비했던 국회권력교체와 진보적 교섭단체 실현이라는 양대 목표를 모두 놓쳤다.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대승, 민주당 참패, 통합진보당 약진이 라고 표현했지만, 당내 대다수 당원들과 당 간부 들은 목표 달성 실패에 침울해 있다. 이제 우리들 은 실패의 원인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이다.

1. 총선에 대한 약평

통합진보당은 MB 정권과 새누리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고 진보개혁세력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해 새로운 진보개혁시대의 문을 열며, 안정적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 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는 목표를 내세우고 총선에 임했다.

총선 결과는 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152석, 민주 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기타 3석이다.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을 막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도 실패했다. 통합진보당이 원래 내세웠던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의석수를 5석에서 13석으로 늘렸을 뿐 아니라, 원내 제3당으로 부상 함으로서 대중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중적으로는 그런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 지만, 원래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선전했다는 기쁨보다는 목표달성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데에 대한 자 괴감이 크다. 특히 전통적인 진보정치 1번지이며 3

명의 현역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던 창원과 울산에 서의 완패와 사천 남해 하동 강기갑후보의 낙선은 뼈아프다. 더군다나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에서 획득한 10.2%는 2010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구(舊) 민주노동당과 구(舊)참여당이 얻은 득표율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로서 양당의 지지층마저 흡수하 지 못했다. 이것은 진보대통합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했던 통합진보당에게는 가히 충격이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통합진 보당이 내세웠던 양대 목표는 실현불가능한 주관 적 기대와 희망에 불과했던가? 아니면 충분히 실 현가능한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캠페인을 잘못해서 실패했던 것인가? 이것이 현재 문제의 초점으로 대두되었다.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에서 몇 가지 긍정적 성 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 선거 정세인식의 안이함 때문이었다. 통합 진보당은 선거정세인식에서 MB 정권 실정의 반사 이익에 기대 안이한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 그 결 과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만 되면 만사가 다 해결 될 것처럼 생각하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적극 적이고 공세적인 선거 전략을 세우지 않았고, 자연 선거 투쟁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MB 심판의 민심은 명확했다. 하지만 반사이익 에 기대 안이한 낙관은 비주체적이고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심판의 반사이익에 기대 매우 소극적으로 선거활동을 펼쳤다. 올바른 정세 판단과 현명한 대안 제시 그리고 주체의 치열한 운동 없이 거저 주어지는 승리란 없다. 상대인 새 누리당은 비대위를 구성해 박근혜를 중심으로 사

력을 다해 선거운동을 전개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다. 양측의 치열성에서 야권연대진영이 패배했다.

둘째, 반MB 연대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MB 심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희망과 대안제시에 실패했다. 그 결과 야권 지지층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일대일 구도만 형성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구도만 있고, 메시지는 없는 야권연대는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입증됐다. 진보개혁세력들은 야권연대가 왜 필요하며, 그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될 수 있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새로운 비전 제시 없이 맹목적인 심판론에 갇혀 있었다.

셋째, 통합진보당의 독자적 정체성과 색깔을 대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정치를 바라는 국민 대중들의 열망의 확산,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진보정당이라는 기본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데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 전술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통해 진보정당의 강화발전은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중들 속에서 각인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야권연대와 함께 민주당과는 차별있는 정책비전과 선거 전술을 통해 민주당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대중들에게 대안정당으로 등장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또한 차별적인 정책 비전과 독자적인 선거 전술을 통해 민주당을 올바르게 견인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그 결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대중속에서 구별·정립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고 열망하는 진보적 대중들을 총 결집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넷째, 통합진보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울산과 창원에서 실패한 것이 뼈아프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한계, 광역의원 사퇴 문제를 둘러

싼 불협화음,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혼란 등으로 인해 노동계급의 통일단결과 이에 기초한 계급투표전략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그 핵심요인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대중적 평가는 이와 다르다. 대중들은 통합진보당이 과거 2004년 총선에서 10석, 2008년 총선에서 5석을 뛰어넘는 13석의 의석을 차지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것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정치를 바라는 국민 대중들의 열망의 확산,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진보정당이라는 기본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데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 전술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통해 진보정당의 강화발전은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2. 향후 정세 전망과 통합진보당의 대북 정책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승을 거두고 야권연대 세력이 완패함으로써 향후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의 위력이 다시 과시됨으로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지가 강화되고,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틀어질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완패함으로써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수많은 내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야권내부의 지도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야권연대세력들은 MB심판구호 외에 이렇다 할 총선 전략과 전술이 없었으며,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여공세자체가 없었다. 선거과정에서 제기됐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역시 주도면밀하게 기획하지 못한 채 즉흥적 대응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

다. 이후 김용민 파동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력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핵심적 문제는 한명숙 지도부의 지도력의 완벽한 부재 문제이다. 이러한 지도력의 무기력증을 극복하지 않는 한 대선 승리를 내다볼 수 없다.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이렇다. 현재 여야의 힘의 역관계는 거의 대등하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6.13%이며 민주당 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6.75%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이 보수와 진보개혁진영의 힘의 역관계가 팽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성적을 놓고 보면 대선에서 여야의 대결전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팽팽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낙관을 하기에는 현재 야권의 태세가 너무 취

이러한 투쟁태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총선과 대선투쟁에서 승리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선거 캠페인에 머물지 않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대역 정치투쟁, 민중들의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한 민중생존권 투쟁을 적극 화하는 문제이다

약하다. 여권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전력투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야권진영은 대선 후보조차 오리무중이며,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다. 올해 대선의 승패는 야권이 얼마나 이러한 흐리멍덩한 상태를 극복하고 질서정연한 투쟁태세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투쟁태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총선과 대선투쟁에서 승리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선거 캠페인에 머물지 않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대역 정치투쟁, 민중들의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한 민중생존권 투쟁을 적극화하는 문제이다. 투쟁 없이 총선 대선 승리 없다는 것은 철칙이다. 대중들의 절절한 요구와 염원, 분노를 결집시키고 응축시키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한다면 필패이다. 대중들의 요

구와 염원,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은 광범한 진보개혁세력들이 연대 연합해서 단결된 대역정치투쟁, 민중생존권 투쟁을 활발히 펼치고 이것을 반MB, 반 새누리당 투쟁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읽고 국민 대중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각종 민중생존권적 요구를 앞장서서 대변하고 관철해 나가기 위한 비타협적 투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 현재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내투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원내외 투쟁을 잘 배합해서 국민 대중들의 힘을 적극 조직·동원해 활발한 민생입법 쟁취투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 비록 의회 과반수 달성에는 실패했더라도 민주당 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할 때 약속했던 민생개혁입법안과 공동 정책과제들을 국민 대중들과 함께 쟁취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19대 개원국회 투쟁을 잘 펼쳐 나가야 한다. 국민 대중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자리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한 민생개혁입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MB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민중적 성격을 폭로, 규탄하고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본질이 대중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원내투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민 사회단체와 국민 대중들과 함께 하는 활발한 대중투쟁을 동시병행적으로 결합해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즉 원내외 병행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정세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미 2.29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대화와 협상국면이 펼쳐질 것처럼 보이더니 북의 인공위

성 발사를 빌미로 한 한미의 강경한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대결상태로 급변해 버렸다. 현 상황은 대결은 대결을 부르고, 급기야는 물리적 충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현 상황이 대화와 협상으로 타개되지 않는다면 2010년대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물리적 충돌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한반도에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물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남북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이며, 이 땅의 민중들에게 불행한 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결적 국면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구조를 되살리기 위한 한반도 평화 실현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대북 정책기조를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남북사이의 모든 문제를 이에 입각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핵은 상호간의 체제 인정과 존중, 공존공영, 공동번영의 정신이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 실현을 남북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문제들을 대결과 물리적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둘째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명백히 반대하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양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체제 공존형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체제 공존형 통일 체제와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민중들의 자주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체제통일론에 입각한 통일추구노선을 반대하는 것이다. 체제 통일론에 입각한 통일 추구노선은 필연적으로 대립과 대결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남북사이의 대립과 대결의 근원은 체제

통일론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과욕에 있다. 체제통일론자들은 상대방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악마화한다. 그 결과 상대의 모든 행위들은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펼친다. 즉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끊임없이 고립 약화시키기 위한 대북정책을 펼치는데서부터 대결과 대립이 나오고 있다.

셋째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 대결상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개하고, 남북 교류 협력 시스템을 되살려 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MB정부가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남북사이의 모든 문제를 이에 입각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명백히 반대하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양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체제 공존형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되살리는 것이다. 넷째 12월 대선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남북대결세력 대(對) 화해협력세력의 대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북대결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점에서 MB정권의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고 있다. 하지만 MB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책전환을 할 의지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 대중들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중행동전에 뛰어 들어야 한다.

넷째 12월 대선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남북대결세력 대(對) 화해협력세력의 대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이 단결단합해 진보적 정권교체투쟁에 나서야 한다. ☺

김정은 체제 구축과 남북대결: 불안한 기싸움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kimosung@kyungnam.ac.kr

4월에 남북 모두 바쁜 정치일정을 보냈다. 남쪽은 19대 총선을 치렀고 향후 4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결과는 예상과 달리 여당의 과반 확보였지만 여야 모두 팽팽히 맞서는 호각지세를 형성했다. 전체 의석은 여당이 앞섰지만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승리했고 전체 득표율도 야권연대가 여당을 앞섰다. 4.11 총선의 정치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여야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 북쪽 역시 당대표자회(4.11)와 최고인민회의(4.13)를 잇따라 열고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후계자 김정은 부위원장을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수령 사망 이후 권력승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정치일정 속에서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즉각 의장성명으로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 역시 안보리 성명을 배격하면서 미국과의 2.2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더하여 남과 북은 정면충돌의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보면서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와 새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를 맞아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보는 것은 그래서 지금 시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4월 중 진행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은 당과 국가기관이 나뉘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대표자회를 열어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비서국 및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핵심 엘리트들을 당내 주요 직책에 배치했다. 물론 국방위원회도 개편해서 김정은 체제를 담당해 갈 새로운 국방위원으로 꾸렸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히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북한은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함으로써 형식적이지만 제도적·절차적 정

특히 이번 공개연설에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평화가 더없이 귀중하지만 지금은 '자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대목은 경제적 성과를 위해 평화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해석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자주와 평화의 길항관계를 연상케 한다.

당성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을 김일성의 반열에 올리고 김정일주의로 격상시키기 위해 당 규약 서문을 개정하고 헌법 서문을 수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나름 국가기관이 제도화되고 있음은 국방위원회 보선을 통해 국방위 산하 각 기관의 수장이 새롭게 교체 임명되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국방위원회는 공화국 전반의 무력과 물리력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산하에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가 소속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수장이 바뀔 경우 당연히 자연스럽게 국방위원도 교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국방위원에 선출된 이명수와 김원홍은 인민보안부장과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진입한 것이 된다. 때문에 국방위원에

서 누락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은 신임 보위부장에게 국방위원직을 넘긴 것이지 이를 두고 숙청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제도적 특성을 잘못 안데서 비롯된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 김정각이 국방위원에 잔류한 것 역시 최룡해가 신임 총정치국장이 되었지만 그는 신임 인민 무력부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권력승계 과정을 통해 북한은 당 기능 정상화와 세대교체를 시도하고 있음도 파악된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선군정치 강조는 부득불 군부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과정에서도 핵심적 주도 역할은 주로 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후계 구축과정에 최고 실세로 떠오른 리영호 총참모장이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권력승계를 마무리하면서 북한은 최룡해를 최측근 실세로 배치하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했다. 군 인사가 아닌 당출신 최룡해를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방위원에 포진시킴으로써 리영호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당우위의 당군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룡해(62)와 김원홍(67) 장성택(66) 등 60대의 실세 등장은 혁명원로와 군원로 대신 김정은 체제의 핵심으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당국가기관의 제도화, 당 기능 정상화와 세대교체의 특징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상당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김정은 체제는 향후 정책기조를 단기적으로는 유헌계승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공개된 김정은의 공개연설 내용과 4.6 담화의 내용에서 큰 줄기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노선을 계승하고 유헌 통치에 충실하겠다는 것이었다. 1월 신년사의 내용을 연상시킬 정도로 별로 새로운 것이 없

는 기존 유헌계승의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한 것이다. 후계준비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각 영역에 대한 김정은의 정치적 장악력과 리더십이 아직은 시작한 단계에서 제도적 장치로서 최고지도자의 직책은 서둘러 확보했지만 이후 정책노선은 여전히 아버지가 제시해 놓은 선군과 유헌을 계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아직 권력이 공고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불리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 정책전환의 불확실성보다는 선대수령의 노선을 이어받는 안전성이 당분간은 리더십 확보와 권력장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의 노선이 유헌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번 공개연설에서 강성국가 건설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은 강경기조를 지속하고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상종불가를 넘어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는 수준이다. 최근 남북대결의 심화는 남북의 주고받기식 감정적 대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북미관계를 겨냥한 북한의 외교적 노림수와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성이 적절하게 결합된 선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평화'가 더없이 귀중하지만 지금은 '자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대목은 경제적 성과를 위해 평화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해석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자주와 평화의 길항관계를 연상케 한다. 최근 외신에서 보도되었던 김정은의 자본주의식 경제개혁 가능성이 눈길을 끄는 것도 그 맥락이다. 일단은 권력승계 초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유헌 계승이 강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식 정책 브랜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은 강경기조를 지속하고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정일 사망 이후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상종불가를 밝혔지만

권력승계 이후 더욱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비난하고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어 ‘찢어죽이자’는 구호를 내뿜는 모습은 단순한 상종불가를 넘어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는 수준이다. 최고사령부 산하 ‘특별작전행동소조’ 명의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방식을 밝히고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개시를 선언한 것은 퇴로 없는 대결 고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김정은 체제의 극단적 대남 강경 입장에는 나름의 배경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와는 결코 상대하지 않겠다는 유헌통치 입장에 더하여 최근 남북이 주고받은 비난과 공격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에스컬레이트 시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을 압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특별작전행동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으로 가 있는 한반도 위기를 낮추고 에스컬레이트된 남북의 대결을 완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불자의 밀어붙이기식 맞대응은 긴장을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위기해소와 문제해결의 답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할 최신무기를 강조하고 국방부가 김정은의 집무실 창문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미사일 동영상 공개한 것은 북한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직후에 북한은 평양군중대회를 열고 상상 불허의 고강도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교육원 특강에서 농지개혁과 인권개선 나아가 자스민 혁명을 언급하며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구전홍보를 거론했고 이는 북한에게 체제붕괴 시도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직후에 북한은 대남 공격을 위한 특별작전행동을 개시한다고 공개선언했다.

물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단순한 엄포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켓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을 피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동력

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게 활용하기 좋은 빌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한껏 고조시킬 경우 미국은 대북압박을 강화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켓 실패와 강성대국 진입의 사실상 무산이라는 인민들의 대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김정은 체제 등장에 맞춰 가장 높은 강도로 체제결속을 확인하기에도 지금의 남북대결 고조는 안성맞춤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남북대결의 심화는 남북의 주고받기식 감정적 대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북미관계를 겨냥한 북한의 외교적 노림수와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성이 적절하게 결합된 선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자마자 공개롭게 남쪽에서 북의 ‘최고 존엄을 겨냥하고 ‘체제 붕괴를 의도한 듯한 발언이 나왔고 북한 역시 최고조의 대남 강경모드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물리칠 수 없는 상호 강경 입장이 교차할 경우 남북관계는 단순한 긴장고조를 넘어 실제적인 군사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상호 상승과정에 들어서버린 대결의 악순환은 자동촉발의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로가 없는 강경 대 강경의 치킨게임 양상에서는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길 경우 견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한반도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특별작전행동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으로 가 있는 한반도 위기를 낮추고 에스컬레이트된 남북의 대결을 완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불자의 밀어붙이기식 맞대응은 긴장을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위기해소와 문제해결의 답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로켓발사 이후 북미관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yangmj@kyungnam.ac.kr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는 갈등과 대화, 갈등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 직접대화, 적극적 외교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1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압박하였고, 그해 4월 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 연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화되기 시작하였다. 아프간, 이란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핵문제는 적극적 포용대신 전략적 인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으로 선화하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고 선부른 6자회담의 재개는 북한에 대한 보상과 협상칩만 높인다는 우려 속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태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대화를 통한 상황관리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였고, 남북대화과 미북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화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2월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남북간 입장차이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였다. 하반기 들어 미국은 직접 대화에 나서게 되는데 2011년 7월, 10월 두 차례의 북미 비핵화 회담과 2012년 2월 세 번째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의 틀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최근 이뤄진 2.29 합의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이후 3대세습의 정권교체기에 있는 북한은 4.13 광명성 3호

발사를 단행하기에 이르렀고, 2.29 합의는 파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그렇다면 향후 북미대화의 전망은 어떻게 보이며, 6자회담 및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이후 대화입장에서 제재입장으로 다시 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명성 3호 발사이후 미국은 2.29 합의의 이행 중지를 공식화하면서,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신속히 안보리 의장성명 도출을 주도하였다. 현재 미국은 2009년의 사례처럼 북한의 추가도발과 핵

따라서 2.29 합의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포괄적이고 정교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북미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말 재선거도까지 북한과 대립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느냐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험을 경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29 합의는 궁극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몰이간 상황에서 북미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다. 미 행정부는 강경한 대북 여론을 의식, 당장 합의 이행으로 전환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마자, 공화당의 대선후보 롬니 진영 측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무능을 비판하고 나섰고, 2.29 합의상 미사일 발사 유예에 위성발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미 협상팀의 아마추어리즘을 성토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어차피 2.29 합의가 고도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었던 임시적, 한시적 합의였고, 그만큼 깨지기 쉬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9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2.29 합의가 정치성을 갖고 있었지만, 어렵게 도출된 만큼, 상황관리의 토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상황관리를 위한 대화 모드로의 회귀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힐러리 국무장관도 최근 CNN 인터뷰에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향해 “북한을 개혁의 길로 이끌어 1000년 동안 기억될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자세 변화와 여건 조성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금 2.29 합의가 깨지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이건 아니면 북한에 강경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건 대북 접근을 재검토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을 펼쳐나감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문안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2.29 합의 이행이나 6자회담과 같은 대화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은 북미간 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미관계를 중재해 나가려 할 것이다

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2.29 합의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포괄적이고 정교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북미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말 재선거도까지 북한과 대립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느냐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미대화는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4월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4.15 태양절 행사를 통해 김정은 세습체제를 본격적으로 공식화하였다.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였더라면 그 기대효과가 배가 되었지만, 그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권력이양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제 권력 내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최근 김영일 당 국제담당 비서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당 대 당 차원의 교류 일환이지만, 북한은 당대표자회 결과 등 북한 내부의 권력 변동 상황과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했음을 중국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만간 김정은의 방중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 미사일 정국이 지나가면 대미 유화 제스처를 통해 2.29 합의이행의 복원을 시도하면서 북미대화 및 6자회담 조기 재개 등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 핵군축,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지, 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루나갈 것으로 보인다. 2.29 합의시 동의한 핵활동 관련 IAEA 사찰단 복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핵무기·미사일 개발 중단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문제를 미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 풀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 군사분야 고위급 채널 가동이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화당 정부보다는 미 민주당 정부가 그나마 낫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2.29 합의가 도출된 만큼, 이를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중국의 입장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지만 결국 2.29 합의와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에 중국이 강경한 표현의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중국만 북한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핵실험과 같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며, 또한 북한 내 새로운 정권이 대선 마당에 신지도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의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항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달리보기 시작했다고 성급히 판단하고 있으나, 냉정과 자


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큰 기류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문안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2.29 합의 이행이나 6자회담과 같은 대화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은 북미간 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미관계를 중재해 나가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정부는 지난해 북미대화 전에 2차례의 사전 남북 접촉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만들지 못했고 북미간 2.29 합의과정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중반 제네바 합의의 사례처럼 북한과 미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을 진행시킬 경우 여지없이 한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지금은 파기 위기에 처해있는 2.29 합의가 북미간 타협으로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한국의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북핵정책을 대북정책과 분리하여 미국과의 분업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가 풀려 나가면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미국과의 공조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지속하고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역할은 더 작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라인 사이에서도 사실상 통미봉남을 가속화시키는 2.29 합의의 복원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미국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주장하고 나올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선 기술들을 정리하자면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 가지이다. 북미간 대화재개가 가능할 것인가, 북한 내부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째, 북미간 대화, 즉 2.29 합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분위기 조성 노력이 중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는 미

국 정부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북한이 과거와 같이 추가도발이나 핵실험을 하는 옵션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군부와 외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군부 입장에 휘둘릴 경우, 북한은 대화보다는 대결 구도로 대외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2000년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사일 문제 해결 등을 담은 북미 공동성명을 도출하고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해 모든 것이 사문화되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직면하여 지금까지의 무관심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되며, 북한 또한 미국과의 협상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부는 대북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칠 것인지, 미국과 협조하여 2.29 합의를 복원, 북한을 대화에 묶어두고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남북 양측 모두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 보다는 전자의 유인이 커보인다. 실제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쏟아내는 대북메시지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고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북핵정책을 대북정책과 분리하여 미국과의 분업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가 풀려 나가면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미국과의 공조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지속하고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남북한 대화 재개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도 신뢰구축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 2012년 5·6월호 (제18호)

발행인 : 박재규 편집인 : 이수훈 편집위원 : 구갑우 · 김근식 · 박후건

주소 : 110-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화 : 02-3700-0700 팩스 : 02-3700-0707 홈페이지 : ifes.kyungnam.ac.kr

※ 『한반도 포커스』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